

韓 · 中 修交와 經濟交流 展望

溫 基 云

〈産業研究院 日本研究室 責任研究員 · 商博〉

1. 머 리 말

韓 · 中 양국의 修交에 관한 공동성명이 92년 8월 24일 서명 · 발효됨으로써 80여년만에 양국간 공식외교관계가 회복되었다.

한국과 중국의 수교는 양국간의 경제교류를 더욱 확대시켜 동북아에 거대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국교관계가 없는 상황에서도 경제협력에 필요한 관련협정을 순조롭게 체결하여 오는 등 경제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관계개선을 이루어 왔다.

먼저 92년 2월에 貿易協定이 발효되어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차별관세에 따른 불이익이 해소되었고 5월에는 投資保障協定이 체결되어 기업들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었다.

기술분야에서도 92년 3월 양국간 科學技術協力諒解覺書를 교환했으며 금융분야에서는 88년 11월 양국 은행간에 換去來協定이 체결된 이래 92년 상반기에는 상호 금융기관 支社交換設立이 합의되었다.

이 밖에 어업분야에서는 제3국적(홍콩) 명의로 어로합작 및 민간단체간 합의를 교환하였고 통신분야에서도 양국간 海底 光케이블 건설을 위한 실무자회담이 韓國通信과 中國電信總局간에 개최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양국간 경제교류확대를 위한 제반 조치는 수교를 통해 그 구체적 실사가 가속화되고

이를 토대로 양국간의 무역 및 투자를 비롯한 경제교류는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에서는 먼저 중국 경제의 현황과 주요 경제정책을 소개하고, 이어 韓 · 中간의 경제교류상황을 살펴본 다음 끝으로 수교 후의 양국간 경제교류에 대해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다.

2. 중국경제의 현황과 주요 경제정책

1) 중국경제의 현황

중국은 78년 鄧小平의 실용주의체제가 출범된 이후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해 왔다. 대외개방정책의 추진 이후 중국의 무역, 외자도입은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자본주의국가로부터의 기술도입에 의해 생산도 증대되었다. 개방 이후의 중국경제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GNP 및 國民收入

중국의 개방 이후 경제성장 추이를 보면 GNP는 79년 3,988억원(91년 기준으로 1원=150원)에서 91년 1조9,500억원으로 증가하여 12년 동안 연평균 14.3%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國民收入도 79~90년 3,350억원에서 1조4,300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4.1%의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88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경제효율저하 및 재정·

무역수지의 악화로 인한 공업생산의 급속한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2) 투 자

78년 이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도 급격히 증가했다. 84~89년 동안에는 연평균 20%를 훨씬 웃도는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85년에는 84년 대비 38.8%나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제조업 기초설비건설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89년에는 88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정부의 整備 · 整頓정책의 영향으로 고정자산투자는 현저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제조업 기초설비건설 투자동향을 보면 농업에 대한 투자는 89년에 전년대비 9.7% 증가한 50억 6,500만원을 기록했으며 공업에 대한 투자는 13.3% 증가한 822억480억원을, 에너지분야에 대한 투자는 8.8% 증가한 446억원을 기록했다.

(3) 고 용

89년 현재 사회노동자 총수는 5억5,329만명이며 이 가운데 농촌노동자가 4억939만명으로 가장 많다. 사회노동자의 총수는 80~89년 기간동안 연평균 약 3% 정도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산업별로는 제1차 산업부문이 3억3,328만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제2차 산업순으로 볼 때 중국의 산업구조는 아직 개발도상국형임을 알 수 있다.

(4) 대외무역

대외개방기인 78~90년 기간 동안 총교역규모는 연평균 15.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88년 이후 1,000억 달러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동기간 동안 수출은 연평균 16.6%, 수입은 14.4%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수출이 수입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78년 이후 무역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78년까지 10% 미만이었다던 무역의존도도 85년에 24.1%를 기록한데 이어 88년에는 27.3%로 크게 높아졌다. 또한 중국 대외무역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8년 이전에는 1% 미만이던 것이 89년에는 2% 정도로 높아졌다.

한편 무역수지를 보면 개방정책 추진 이전에는

대체로 균형 혹은 흑자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개방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78년 이후에는 82,83년을 제외하고는 적자를 기록했으며 85년에는 국내경제의 과열과 소비재 수입의 급증으로 149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그후 다소 줄었던 적자폭이 88년에는 다시 크게 확대됨에 따라 중국은 강력한 수입억제와 수출증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적자폭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며 90년에는 대폭적인 흑자로 반전되었다.

대외무역구조에 있어 수출입상품구조를 보면 원유, 식품, 섬유제품 등 1차산품과 경공업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전자재, 기계설비 등 공산품을 수입하는 전형적인 개발도상국형 무역패턴을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출상품 구성에서 1차산품의 비중이 감소하고 공산품 비중이 늘어나는 등 상품구조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1차산품과 공산품의 비율을 보면 70년대 말까지는 1차산품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86년 이후 이 비율은 역전되어 공산품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90년에는 그 비중이 74.4%에 달했다.

수출상품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섬유사, 직물, 의류 등 섬유제품이며 이들 섬유제품은 전체 공산품수출의 반 이상을 차지, 전체 수출액에서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공업제품중 기계, 전기제품의 수출확대에 노력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들 산업은 수출전략산업의 역할을 부여 받고 있다. 최근의 수출상품구성은 공업제품의 비율이 늘어나는 가운데 가공도가 높은 제품과 최종제품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편 수입상품구조에서는 84년 이후 공산품 수입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입상품 중 강재, 원목, 화학제품, 농업·공학기계 등이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기계, 전기제품의 수입은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수입억제정책과 함께 수입대체품 개발정책의 결과이다.

지역별 무역구조를 보면 중·소대립이 있기 전까지는 주요 교역상대국이 주로 사회주의국가들이었으나 이후 사회주의권과의 교역 비중은 낮아지고 자본주의권과의 교역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90년의 경우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국가와의

교역 비중은 6.8%에 그친 반면 그밖의 국가들과의 교역 비중은 90%를 넘고 있다. 특히 선진공업국과의 교역이 전체교역의 44.4%를 차지하고 있다. 국별로는 87년 이후 홍콩, 일본, 미국이 수출입 모두 1,2,3위를 기록하고 있다.

(5) 외자도입

중국은 79~90년 기간동안 계약기준으로 총 3만 1,063건, 995억8,600만 달러에 달하는 외자를 도입했으며 그중 실행금액은 680억7,550만 달러를 기록했다. 대외개방 초기인 79~82년에는 대외차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83년 中外合資經營企業法 실시조례가 공포되고 84,85년 대외개방지역이 크게 확대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속히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 기간중 직접투자는 84년의 경우 계약기준으로 26억5,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53.1%의 증가율을 보인데 이어 85년에는 59억3,100만 달러에 달하여 84년에 비해 123.8%나 증가했다. 동기간 중 대외차관도 증가세를 보였지만 직접투자의 증가가 두드러져 전체 외자도입에서 차지하는 비중(계약기준)은 직접투자에 미치지 못했다.

84~85년 기간중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직접투자는 86년에 들어서면서 외환수지균형문제 등 중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불만이 그대로 반영되어 86년에는 계약기준으로 전년대비 52.2% 줄어든 28억3,400만 달러에 그쳤다.

그러나 86년 「外國人投資企業의 外換收支均衡問題解決을 위한 規定」, 「外國人投資獎勵規定」(22개조)과 일련의 시행세칙의 공포 등 중국 당국이 투자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 힘입어 87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는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87년, 88년에는 전년대비 30.9%, 42.8% 각각 증가했으며 88년의 경우 직접투자액(계약기준)은 52억9,700만 달러에 달했다.

이 시기의 대외차관과 직접투자의 상대적 비중을 보면 87년 64 : 30, 88년 61 : 33으로 나타나고 있다. 89년의 경우 직접투자는 계약기준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한 50억 달러를 유지하는데 그쳤고 대외차관은 88년에 비해 47.2% 감소했다. 이는 89년 6월의 천안문사태로 인한 서방국가들의 對中 경

제제와 투자분위기의 급속한 냉각 등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90년에는 중국의 외자이용은 활기를 회복했다. 대외차관의 경우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제가 1년 이상 계속되었기 때문에 政府차관은 부진했으나 세계은행, ADB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관은 크게 증가했다. 직접투자는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89년의 부진에서 벗어났으며 그중 단독기업의 신장세가 크게 두드러졌다.

중국의 직접투자 유치현황을 형태별로 살펴보면 70~90년 기간동안 건수에서 合資(56.1%), 合作(32.1%), 單獨(11.7%) 순이었다.

직접투자의 국별현황을 살펴보면 79~90년 기간 동안 홍콩·마카오가 줄곧 선두를 유지하면서 그 비중도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미국, 일본순이다. 이들 국가로부터의 도입액은 전체 도입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별 투자현황의 특징을 살펴보면 홍콩, 일본의 경우 서비스와 관광부문에 대한 투자가 많고 經濟特區에서 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구미국가들은 제조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많고 沿岸도시에서 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별 직접투자 유치현황을 보면 廣東省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廣東省에 3개 경제특구가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海南省, 沿海都市, 삼각주지역 등 모두 9개의 대외개방도시가 분포되어 있음에 따라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외자도입과 그 이용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廣東省 다음으로 上海市의 직접투자액이 높는데 이는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공업기반이 비교적 잘 조성되어 있고 숙련된 노동력을 갖추고 있어 내륙지역에 비해 유리한 입지조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福建省의 경우 88년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만자본의 진출증가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北京의 경우 부동산 관련 투자가 활발했다.

직접투자의 업종별 유치현황을 살펴보면 86년까지는 부동산개발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반면에 중국정부가 특별히 장려했던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수송, 통신, 기계, 전자, 원재료부문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부동산개발분야는 주로 호텔건설을 가리키는데 외자획득이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외국기업들이 선호했던 때문이었다. 그러나 86년 중국정부가 호텔 등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억제하고 대신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는 적극 장려하는 시책을 펴나감에 따라 87년부터는 공업분야의 직접투자 유치가 비약적으로 증대했다. 공업분야는 87년에 17억7,600만 달러를 유치하여 직접투자 계약총액의 47.9%를 차지한데 이어 88년 75.9%, 89년 83.3%, 90년 84.4%로 계속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한편 대외차관의 도입현황을 보면 개방 초기에는 전체 외자도입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가 83년부터 직접투자의 증가가 두드러짐에 따라 83~85년 기간동안에는 직접투자에 비해 비중이 낮았다. 그러나 86년부터 外國商業銀行借款의 도입이 크게 늘어나 86~88년 기간에는 전체 외자도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시 직접투자를 상회했다. 89년의 경우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로 인하여 전년에 비해 47.2% 감소(계약액 기준)했으나 90년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도입선별로 보면 日本과 世界銀行으로부터의 차관이 가장 비중이 높다. 그중에서도 일본은 79년 이래 현재까지 중국에 대한 차관 공여를 꾸준히 증가시켜 왔으며 국별 순위는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2) 주요 경제정책

(1) 무역관리정책

중국의 무역관리정책의 기본방향은 대외무역관리의 분업화와 대외무역 및 해외투자촉진을 위한 새로운 조치들의 실시로 압축할 수 있다. 이는 종전의 대외무역관리의 과도한 집중, 수출입업무의 과도한 통제를 개혁하여 이를 적절히 하급기관에 분산시킴으로써 각 省·市·自治區 및 관련 생산부문으로부터 여건이 갖추어진 기업에 이르기까지 대외무역의 자주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근본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주의 중국이 대외무역의 역할로서 내세운 기본적인 골격들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무역관리조직으로서 종전에는 對外經濟貿易부가 연간 수출입계획을 작성한 후 이것을 기초로 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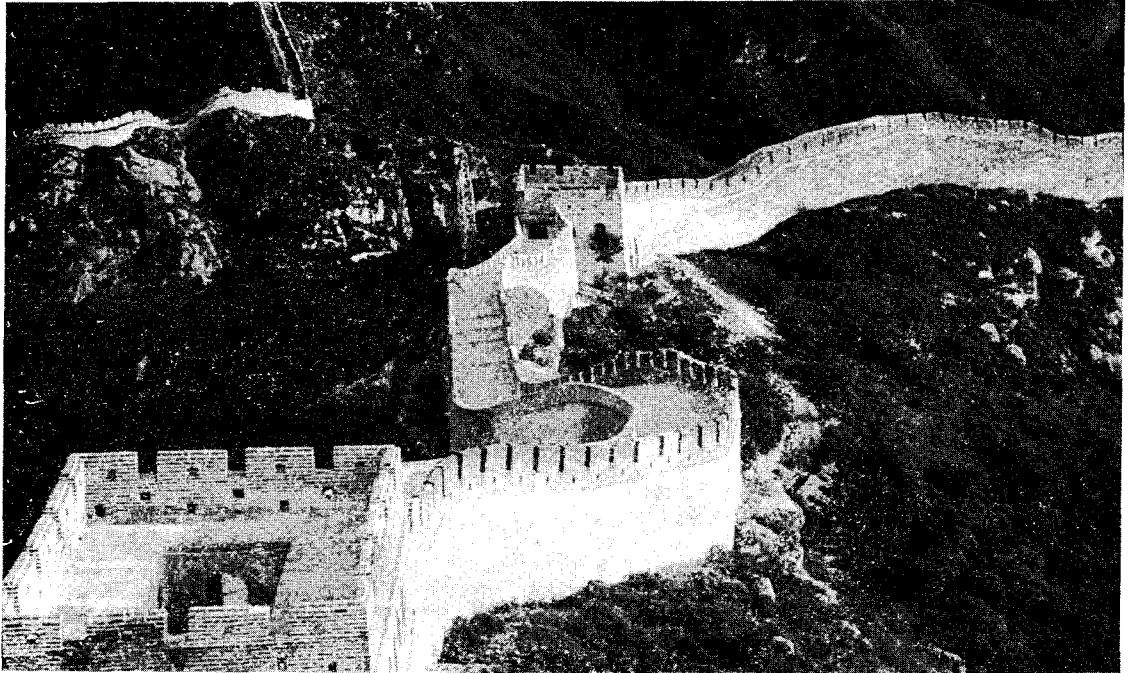
동조직 산하의 中央專業總公司를 통하여 각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부터 수출을 위한 제품들을 구입하고 수입품의 분배를 행하였다. 그러나 행정과 기업의 분리 이후 대외경제무역부 및 省·市·自治區의 대외경제무역청(局·위원회)은 무역의 통일지도·통일관할의 원칙아래 국가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무역업무만을 주로 취급하게 되었으며 각종 貿易公司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관리 측면만을 전문적으로 행하게 되었다. 또한 무역공사는 이때까지 종속되어 왔던 행정부문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출입업무를 행하게 되었다.

수출입관리정책으로서는 輸出入許可證管理, 輸入管理, 輸出入代理制 등이 있다. 輸出入許可證管理은 제품의 수출시에 있어서 중앙당국과 地方貿易管理體系의 비합리성으로 말미암아 자국내 輸出公司간에 수출경쟁이 심화되어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수출가격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88년에 도입된 것이다. 輸入管理은 불필요하거나 잠정적으로 수입의 억제가 필요한 물자나 상품의 수입을 조절하여 무역수지 균형을 도모하고 국내산업을 보호육성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83년 도입된 수입허가제도가 그 주된 내용이다. 輸出入代理制는 무역기업의 재정부담을 덜 주면서 수출품 제조업체와 수입품과 동종 제품의 국내 제조기업에의 적절한 경쟁력과 수입저지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 외자도입정책

중국은 78년 12월 당 제11기 3중全會에서 대외 개방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그동안 경직된 自力更生 노선속에서 금기시되었던 외자도입을 본격화했다.

중국은 먼저 외자도입 조직체계를 정비했다. 79년 7월 進出國管理委員會와 外國投資管理委員會를 설립하여 외국차관, 외국인투자유치를 총괄하게 되었다. 82년 3월에는 국무원의 기구개편을 단행하여 進出國管理委員會, 外國投資管理委員會, 對外貿易部, 對外經濟聯絡部의 4개 기관을 對外經濟貿易部로 통합하여 무역 및 외자도입을 통일적·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몇 개의 주요 기관을 설립했다. 79년 10월, 中國國際信託



投資公司(CITIC)를 설립하여 동공사로 하여금 해외자금을 도입, 운용하고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의 중개자로서 정보의 제공, 알선을 행하게 하였다. 또한 81년말에는 中國投資銀行(CIB)을 설립하여 中國은행과 함께 중국기업에 대한 중장기 대외차관 도입, 보증, 합자기업에 대한 자본참여 등을 하도록 했다.

외자도입 관리체계를 확충함과 아울러 외자도입 관련법규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법규를 정비했다.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정책에 착수한 중국은 경제관계법 및 행정규칙을 계속적으로 제정·공포해왔다. 그러나 경제개혁의 진전에 법령이 뒤따라가는 상황이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에도 경제관련 법체계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각종 경제관련 법규중에서 대외경제관련 법규의 정비는 외국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법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이 가장 중시해 온 부분이다.

79년 7월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이 공포된 이후 90년말까지 500개에 가까운 대외경제관련 법규가 제정되었다. 동법규들은 무역활동에 관한 권리와

업무, 외국기업의 對中투자의 조건, 방법, 절차, 우대조치 등에 관한 제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3) 투자유치를 위한 지역관리정책

① 經濟特區

경제특구는 중국이 육성, 개발하고자 하는 산업에 진출할 의사를 갖고 있는 외국기업들을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이 지역에 한해서 특별한 정책을 실시하는 지역이다. 여기서 특별한 정책이란 다른 지역에 비해 대외개방의 폭이 보다 넓고 여러 가지 우대조치가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 경제특구는 특구설치 당시인 80~81년에 비해 규모와 성격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초창기의 수출특구로부터 종합적 특구로 변화된 점이다. 현재 특구설치 지역은 廣東省, 珠海, 深圳 및 汕頭와 福建省의 4개市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일부 특별지역과 海南島 전역이다.

② 沿岸開放都市

84년 鄧小平은 特區의 외자도입에 의해 이룩된

경제건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 성과로 대외 개방노선의 정당성이 입증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를 계기로 하여 84년 연안 14개 도시의 개방이 결정되었다. 이들 지역은 공업총생산액, 수출액, 노동생산성 등에 있어서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중국의 선진지역이었다. 14개 연안도시의 개방은 연안도시의 경제발전을 기초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수출산업을 육성하여 종래의 内向型경제를 内外綜合型 경제로 전환시켜 내륙지역의 경제발전을 확대·가속화하려는 경제발전전략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연안도시에는 일정 구역의 經濟技術開發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집약형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지구의 건설을 도모하고 있다. 경제기술개발구는 특구처럼 독립된 행정구역은 아니나 해당 市の 직집지도하에 개발구 관리위원회가 행정관리를 담당하여 기술개발, 첨단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구역이다.

③ 沿海經濟開放區

85년 국무원은 기존의 경제특구, 연안도시에 이어 연해경제개발구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결정했다. 연해경제개발구 설치는 88년에 제기된 국제대순환 경제발전전략에 입각한 연해지구경제발전전략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동전략은 연해지역전체의 경제활동을 국제시장과 연결하여 국제경제순환

속에 편입시킨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세계경제의 변동하에서 선진공업국은 산업구조 조정을 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집약형 산업은 해외의 저임금지역으로 이전되고 있으므로 중국의 연해지역을 이러한 국제경제의 대순환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연해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해지구개발전략에 입각한 연해지구의 전면적 개방화는 과잉노동의 해소, 노동집약형 산업의 비교우위 등에 비추어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

3. 韓·中간의 경제교류 상황

1) 무 역

韓·中 무역이 괄목할 만하게 증가한 것은 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양국간의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무역규모가 30억 달러를 넘어서부터이다.

91년의 무역액은 58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처럼 韓·中간 무역이 급증한 것은 무역대표부의 교환설치를 비롯하여 경제관련협정중 무역협정이 91년 12월 그리고 투자보장협정이 92년 5월에 각각 체결되었고 전세기 운항과 여객선 통항 등 교역환경 분위기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韓·中 무역은 한국의 총대외무역액중 3.79%의 비중을 차지했고

對中國 10大 수출상품

(單位: 천 달러, %)

순위	품 목 명	92.1~7월	91 연간	동기증가율
1	철 강	233,520	116,611	420.1
2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70,908	90,776	342.7
3	인조단섬유	98,734	137,499	31.6
4	원피(모피제외)와 가죽	82,931	68,698	141.0
5	전기기와 그 부분품	80,127	120,015	18.8
6	유기화학품	74,758	63,274	103.9
7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73,730	68,267	212.3
8	인조장섬유	61,001	57,699	96.8
9	철 강 제 품	47,737	25,471	351.1
10	지와 판지: 제지용펄프, 지	44,212	30,178	251.1

資料: 韓國貿易協會

註: HS Code 2단위 기준, 관세청 통관기준

중국의 총대외무역액중 4.27%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이같은 규모는 91년 북방지역과의 총무역액 80억4,000만 달러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북방 무역의 선두를 견지했다.

지금까지 양국간 무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품구조상의 특징을 보면 대체로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수입특화현상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옥수수, 비료, 농산물과 석탄, 석유와 같은 광산물 등 자원이 차지하고 있고 둘째, 기계류 및 전자·전자제품은 수출특화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셋째, 섬유·화학·철강 등 분야는 양국 모두 수출입규모가 비슷하여 산업내부업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91년의 경우 일시적 수요폭발로 시멘트와 일부 전자제품의 수입급증현상이 나타났다.

대중국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섬유를 중심으로 하여 화학, 철강의 원료제품인데 그 비중이 80년대 초에는 한때 80%선까지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그 상대적 비중이 낮아져 50%선으로 하락하고 있다.

두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계, 전자분야는 최근의 상승추세를 반영하여 80년대 초 10% 수준으로부터 30%선을 넘어서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향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기계, 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중화학분야에서 점차 상승분위기가 조성되는 한편 섬유류를 중심으로 하는 원료제품의 무역도 꾸준히 안정세를 보여줄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한국의 전체 수출상품구조를 중국의 전체 수입상품구조와 비교해 보면 양국간 무역이 각각의 대외무역 구조 및 추세와 분야별로 대체로 균형된 배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79년 이래 중국의 수입상품구조는 대략 생산재 80%, 소비재 20%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생산재는 기계 및 전자 30~35%, 원자재는 섬유원료 10~15%, 철강 5~15%, 비료 3~5%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91년 수출구조는 중화학제품이 전체의 60% (430억 달러), 섬유류가 21% (155억 달러)를 차지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기계류와 석유화학제품이 전년대비 28% 증가라는 대폭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자·전기류가 13%, 섬유류가 5%

증가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기타 경공업제품은 약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같은 상대적 구조 안에서 최근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는 섬유류 35~40%, 기계·전자 20~25%, 화학 10~15%, 철강 10~15%의 비중을 보임으로써 대체로 균형 있는 보완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국 수입구조는 농산물 및 광물자원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외수입중 상당부분을 보완하고 있으나 기계·운송장비 및 전자·전기 분야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중국의 산업구조가 한국에 비해 뒤져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2) 투 자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91년말 현재 총 181건 (우회투자 포함)에 1억6,570만 달러가 인가되었으며 그중 64%가 91년중에 추진되었다. 주요 투자분야는 해외시장에서 중국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분야인 섬유, 봉제, 신발, 완구, 피혁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신발분야는 200만 달러 이상의 투자업체만도 92년 1월 현재 5개소에 이르고 있다.

투자지역을 보면 종래 홍콩인접지역인 廣東省이 중심이었으나 점차 山東省과 北京·天津지역, 遼寧·吉林·黑龍江省 등 東北三省 그리고 福建·上海 등 전 해안지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는 중국의 각 지역이 서로 다른 특색과 장점을 지니고 진출하는 업종에 따라 판단기준이 다양하며 점차 폭넓은 정보를 수집하여 직접 현지조사를 수행하기가 용이해짐에 따른 경향으로 보인다. 또한 개방의 추이가 남부지방으로부터 북부지방으로 확산되는 경향이나 투자환경의 점진적 호전양상에 따른 영향, 지리적 영향 등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투자업종은 제조업이 160건, 1억4,800만 달러로 전체 건수의 88%, 금액으로는 90.5%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업과 요식업이 각 6건, 무역, 광업이 각 3건, 기타 3건으로 되어 있다. 제조업내에서는 섬유 및 봉제가 36건, 전기·전자 21건, 신발·피혁 18건, 식료품 13건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저임금을 겨냥한 노동집약형 투자를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의 평균투자액은 92만 6,500달러로 중국의 전체 직접투자 도입의 평균투자액 92만2,000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4. 수교 후의 경제교류 전망

한국과 중국의 경제교류는 80년대 중반까지는 양국을 둘러싼 정치적 역학관계 등 경제외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아 왔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제외적 요인보다는 경제적 이해를 토대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양국간의 경제교류가 빠르게 증대되었다. 특히 양국의 경제교류는 86년 서울 아시아 경기대회, 88년 서울 올림픽 경기, 90년 북경 아시아 경기대회의 개최 등을 계기로 한 인적 교류의 확대, 상호보완성에 대한 인식 확산 등이 경제적 요인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확대기조를 지속하여 왔다.

이러한 양국간 경제교류의 확대기조는 수교를 계기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양국은 기존의 형성된 협력기반을 바탕으로 이제까지 외형상 민간차원에 머물러 오던 교류관계가 정부차원으로 격상됨으로써 한층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제교류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양국간 경제교류는 미수교라는 정치적 장애물에 부딪쳐 외형상의 진전과는 달리 내용면에선 애로가 가중되어 왔다. 공식적으로 국가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상담을 위한 인적교류절차가 복잡했으며 상사주재원들에게 3개월짜리 단수 비자만을 발급, 불편을 겪어야 했다. 중국지사 설치도 제한되어 왔을 뿐 아니라 무역도 간접무역 중심으로 이루어져 수출가격면에서 불리한 경쟁밖에 할 수 없었다. 특히 92년 2월에 폴리긴 했으나 한국상품에 5~30%의 차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대중무역적자를 누적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 왔다. 투자사업에서도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다른 나라의 기업들에 비해 투자비용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수교로 이같은 장애요인이 제거될 수 있게 된 데다 정부측이 무역 및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어 여건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민간협정으로 체결된 무역협정과 투자보장협정을 정부간 협정으로 격상시키고 이종과세방지협정의 체결도 계획중에 있다. 또 서울·북경간에 직항로를 개설하고 仁川·大連간 해운직항로를 추가로 개설

하여 인적 및 물적교류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제도 및 여건개선과 아울러 소규모 투자위주로 추진된 대중투자가 대형화·다각화되는 계기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측이 경제개발을 위해 8차 5개년계획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투자에 따른 위험도 보장됨에 따라 철강, 석유화학, 전자통신 등 기간산업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도로나 항만, 공단건설 등의 개발사업에의 참여도 활발하게 모색될 전망이다. 나아가 한중수교가 북한의 개방을 자극함으로써 남북경제교류와 인적교류를 가속화하는 효과도 예상되고 있다. 또 동북아 경제권이나 中華 경제권대동과 연계해 범아시아적인 경제협력기반을 구축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시장경제경험이 부족한 사회주의국가이고 중국자체의 국제경쟁력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접근전략모색이 필요하리라 하겠다.

우선 투자사업의 경우 법령의 내용이 애매하고 내부절차가 복잡해 각종 인허가절차가 자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진출기업에 대해서 인력채용이나 수출의무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사례도 있고 중국측의 소유지분을 높이기 위해 토지사용권이나 설비 등 현물출자분을 과다하게 평가토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체계가 낙후되어 있어 송금절차가 지연되고 사회간접자본시설 낙후로 통신이나 원부자재 수송이 차질을 빚기도 한다. 최근 들어서는 토지 임대료나 인건비가 크게 올라 종래와 같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진출은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역측면에서도 분쟁조정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아 클레임처리가 어렵고 정보나 통계를 입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또 국내정책에 따라 수출입정책을 빈번하게 변경하거나 국제규범에 벗어나는 수입규제를 동원함으로써 예상치 못하는 애로를 겪는 수도 있다.

끝으로 韓·中 수교를 계기로 한 우리의 대중국 진출 유망분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대형프로젝트에의 참여이다. 9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8차 5개년계획에는 사회간접자본확충과 국영기업 후호설비개체사업 등 대규모 프

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투자예정 예산은 3,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은 산업발전과정상 미국, 일본 등 월등히 앞선 선진기술보다는 한국수준의 기술을 선호하고 있어 중국의 설비개체에 따른 플랜트 수출은 더욱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차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중국국가계획위원회가 추진중인 92년 중점 건설항목만도 179건에 이른다. 이 중에는 석탄개발 22건, 석유 8건, 철도 21건, 교통 14건, 민간항공 3건, 철강 5건, 비철금속 9건, 화공 11건, 석유화학 4건, 전자재 3건, 의류 1건, 기전 및 자동차 5건, 방직 5건, 과학·교육 6건, 위생 2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프로젝트중 우선 주목되는 것은 上海포동지구개발사업이다. 이는 향후 20년간 중국 최대의 경제·무역·금융·공업의 중심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개발면적만도 350평방km에 이른다. 90년대 중반까지 우선 100억 달러의 외자를 도입, 자유무역항과 국제공항, 국제금융센터, 수출보세구역, 수출가공구역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長江 삼협댐 건설사업도 110억 달러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이는 93년부터 2007년까지 15년간 호북성 의창현에 대규모 댐을 건설하고 長江유역의 23개 주요도시에 100개 이상의 경제개발지구, 과학기술단지, 외국자본유치, 첨단산업지구를 건립하는 프로젝트이다. 내몽고 지역의 대형 노천탄광개발사업과 大同 등 6개 광구 확장 및 신설사업 등 석탄개발사업도 우리 업체의 관심을 끄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 철도, 도로, 항만개발, 공항의 개축 및 확장공사에의 참여도 고려해 볼 만하다.

둘째, 주요 업종의 투자활성화이다. 중국의 외국기업 투자유치는 자본과 기술도입, 수출촉진, 경영노하우 습득 등에 목표를 두고 있어 우리의 중국투자는 반드시 수출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내수시장을 목표로 한 투자진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의 수출업종 가운데 중국의 저임금 메리트를 이용할 수 있는 섬유, 의류, 가방, 신발, 피혁 등의 노동집약적 경공업부문이 당분간 중국투자에 유망한 업종이 될 것이다. 國際民間經濟協議會가 운영중인 투자고문센터의 商談실적에 따르면 92년 1~4월까지의 중국투자상담 총 193건에서 섬유·봉제가 31건, 신발·피혁이 13건, 전자재가

11건, 화학이 10건 그리고 금속·기계는 17건으로 경공업 투자상담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중국과 2중 과세방지협정 등이 체결되어 우리 기업의 중국투자에 상대적인 불이익이 없어지게 되면 전자, 석유화학, 에너지 등 중화학공업의 대규모 직접투자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형태로서는 우리 기업이 투자持分을 100% 갖는 단독기업의 형태인 경우 적절한 합작파트너의 선정이나 복잡한 협상과정을 피하고 보다 독자적 경영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규모의 수출지향형투자인 경우는 이 투자형태가 보다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원자재를 현지에서 조달하고 일부 생산제품을 중국의 내수시장에 판매할 경우는 중국 합작先의 기존 판매네트워크나 원자재조달先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合資기업이 보다 유리할 것이다.

셋째, 농업·어업부문에의 진출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흑룡강성 三江평원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은 三江평원내 부금, 두홍지구 3만ha (9천만평)에 대단위 농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소요자금만 3,900만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 92년 1월 공동개발에 관한 정식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향후 이 부문의 투자가 유력시된다. 이밖에 농림업 전문가 교환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업분야에서는 이미 어선해상처리합의서가 체결되어 있고 공동어업 조업을 하고 있다. 현재 홍콩 또는 마카오에 韓·中 합작어업사(현지법인)를 설립하는 작업이 진행중인데 향후 어업분야에의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과학기술분야에서의 공동협력과 기술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전국적으로 약 5,000여개의 연구기관을 갖고 있고 이곳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인력만도 1,000만명에 이르는 등 과학기술자원이 방대하며 우주항공, 레이저, 가속기 등 물리학분야기술, 신소재기술 및 군사기술부문 등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반도체, 전자, 원자력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은 보완적 협력파트너로 평가받고 있다. 이밖에 해양, 동양의학, 문화재관련기술분야에서도 협력잠재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